

# / ENVIRONMENT // NEWS /



## 건설폐기물 처리과정 ‘환경관리’ 강화

도로에서 덮개도 없이 건설폐기물을 싣고 달리는 트럭 뒤를 따라다보면 먼지는 돌째 치고 돌이라도 떨어져 날아오지 않을까, 덜컹 겁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이 금속 또는 금속에 준하는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보다 먼저 오는 12월 13일부터는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와 중간

처리시설의 승인·허가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시설 허가 시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은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문제 매듭

그간 절차적 하자 논란을 빚어온 올해 ‘물이용 부담금 부과율’ 문제가 매듭지어지고, 내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또한 진통 끝에 합의되었다. 지난 6월 17일 개최되었던 제60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물이용부담금을 종전대로 170원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도 부과율은 10원 인하하여 톤당 160원씩 책정하기로 안건을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됨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17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동안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서울시는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를 해제하고 그 간 미납한 물이용부담금을 일시에 납입 재개하기로 하였으며, 인천시는 납입정지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2014년도 한강수계기금운용계획(안)은 실무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원안(총 지출액 4,685억원)대로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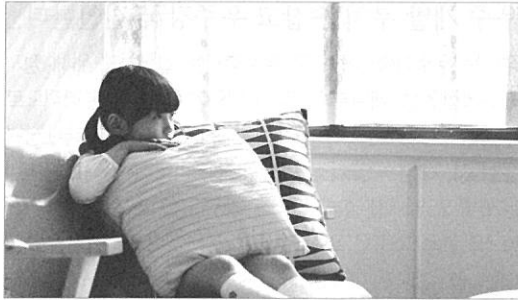
## 충간소음 분쟁의 신속·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

충간소음으로 인해 살인까지 일어나는 무서운 요즘,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인한도(受忍限度)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의 발생으로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번엔 새롭게 강화된 충간소음 수인한도는 주간 40dB(A), 야간 35dB(A)



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충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분쟁위는 공동주택 위·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와 더불어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 ENVIRONMENT // NEWS /



우리 아이 환경오염 노출 정도는? 건강영향 조사 실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은 환경오염 노출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8~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유해환경노출 및 건강 실태 파악을 위한 2차년도 조사에 착수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2차 년도 조사는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1,700여 명의 전체 조사표본 중 1차년도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9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는 오염물질 노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 또는 요 중 납, 수은, 카

드뎀 등 중금속 3종과 비스페놀 A 등을 분석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노출에 따른 환경성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단위 인체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잘되나 살펴보니...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고 있다. 144개 지자체 중 현재 종량제를 시행중인 129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에서 일주일간 모니터링을 실시 했는데, 그 결과 경기도의 경우 27개 지자체중 21개 지자체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유예·계도기간을 설정(5~8월)하여 시행 전 오류를 최소화 한 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기존에 실시하던 무상 또는 정액제 방식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종량제 방법의 잦은 변경 등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사례가 있었다. 환경부는 주간 단위로 종량제 정상 추진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종량제 시행에 따른 가구별 월부담액은 700~2,000원 정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으로 동참 할 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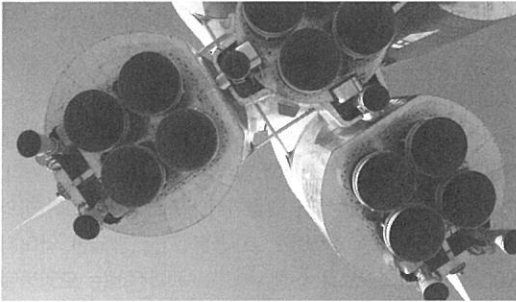
환경마크로 중소기업 경쟁력 '쑥쑥'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은 친환경 제품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해 환경성 진단을 포함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과정 환경성을 진단 및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경마크 인증 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가운데 10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제품의 환경성 진단과 분석,



개선 방안 도출, 환경마크 인증 취득 지원 순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친환경제품 의무구매를 통해 판로를 확장할 수 있고, 조달청의 물품 구매 적격심사에서도 가점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ENVIRONMENT // NEWS /



## 우주 개발 부처 손잡고 우주강국 견인한다.

정부는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제도·복합위성 개발부처 간 정책연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와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 기상청(청장 이일수)은 6월 25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치·제도·복합위성 개발 및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 해양, 환경 분야 공공수요에 따라, 관측용 위성(정치·제도·복합위성) 개발을 추진하는 4개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위성개발 및 위성정보 활용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네 기관은 △정치·제도·복합위성 개발 △위성정보 활용 △우주산업화 협력 △우주동향 공유 △정책협의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정례적으로 부처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 연계 및 개발·활용 협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내비게이션으로 자동차 연료절약 구간 안내받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현대엠엔소프트(주)(대표 유영수)는 연료절약에 효과적인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구간을 2013년 6월부터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무가속 운전'은 차량 운행 중 가속 페달에서 발을 뺀 채 차량의 관성을 이용해 운행하는 방법으로, 연료소모 없이 일정구간을 운행하는 '친환경 운전' 방법의 하나다. 이번에 안내되는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 지역은 수도권 내외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및 고속국도의 총 29개 구간으로 평균 구간 길이 약 1,085m, 총 연장 3만 1,476m, 경사도 3% 내외다. '내리막길 무가속 운전구간' 안내 정보는 2013년 6월 이후 신규판매 또는 기존 사용자가 업데이트하는 '소프트맨 내비게이션'을 통해 제공된다. 환경부는 여러 업체와도 협력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소외계층 없는 여름휴가, 생태나누리가 함께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정광수)은 7~8월 휴가철을 맞아 국내 관광활성화와 사회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국립공원에서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지난 6월 밝혔다.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생태체험 기회가 적은 소외계층에게 생태관광 기회를 제공해 행복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산림청 녹색자금,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등의 공적자금과 기업후원금을 통해 약 2만 명에게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7~8월에 집중 운영되는 생태나누리 프로그램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희망원 등 20개 아동보육시설에 있는 아동과 서울북부하나센터 새터민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국 국립공원에서 자연관찰, 자연치유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실시될 예정이다.

/ ENVIRONMENT // NEWS /



**부동산 거래 전 잠깐! 토양오염 여부 확인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양오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토양환경평가제도의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토지거래 규모가 연간 18억 2,373만 8,000㎡에 이르고 이중 오염 개연성이 큰 공장부지와 주유소의 거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부지의 매매를 둘러싼 분쟁 또한 줄을 잇고 있다. 외국은 토양오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하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사전 토양오염조사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토양환경평가제도에 대한 인식과 활용이 미진한 상태다. 이번 수립된 '토양환경평가제도 활성화 방안'은 정화책임에 대한 법적 위험성 관리와 정화비용에 관한 재무 위험성 관리에 초점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추진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소식**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

**韓·中경제인, 에너지·환경산업 협력 다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함께 지난 6월 20일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靑島) 샹그릴라 호텔에서 '제5회 한중 녹색경제협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열 OCI 부회장 등 한국측 인사 100여 명과 완지페이(萬季飛)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중국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성장가능성이 큰 녹색산업에 양국 정부가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중국의 녹색기업인들이 나서 '에너지·온실가스 저감기술 교류 확대방안'과 '환경·자원순환 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발표를 했다.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2·3차 협력사까지 확산시키기 위한 '산업혁신운동 3.0'이 공식 출범했다. 운동의 취지에 공감한 11개 대기업이 2013년부터 5년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55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 6월 18일 '산업혁신운동 3.0 출범식'을 개최하고,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11개 대기업과 자원출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

상공회의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대중소기업 CEO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혁신운동 3.0'은 1970~80년대 개별기업의 성장에 집중했던 공장새마을운동(1.0)과 대기업·1차 협력사 중심의 성과공유제(2.0)를 발전시킨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로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